

담당부서 : 사법정책실

담당자 : 김상운 심의관

공보관실 : ☎ 3480-1255



-법원 사상 최초로 변론에 대한 생방송 중계 실시-

- 대법원은 3. 21.(목) 14:10 대법정에서 대법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법원 사상 최초로 **변론**에 대한 **실시간 중계방송**을 하기로 함(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재판의 **변론**에 대해 생중계는 물론 중계방송 자체를 실시하는 것은 최초임)
-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와 일반 방송 등을 통하여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음

Ⅰ 실시간 중계방송 관련

- 일정
 - 2013. 3. 21.(목)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소요 예정
- 방송중계
 -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
 -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(KTV)가 전 과정을 생중계
 - YTN, MBN에서는 KTV로부터 화면을 제공받아 시작 부분 등 일부 생중계 예정
 - KTV는 원하는 방송사 등에 화면을 제공할 예정임

② 변론 진행 계획

○ 변론 진행 순서

- 14:10 개정, 공개변론의 취지, 진행순서 등 설명(대법원장, 약 5분)
- 14:15 모두변론(검사 - 변호인 순서, 각 7분 예정)
- 14:30 참고인 의견진술(곽민희 교수 - 오영근 교수 순서, 각 7분 예정)
- 14:45 대법원장, 대법관들의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(검사, 변호인, 참고인들에 대한 질문/답변 함께 진행, 20분 예정)
- 15:05 마무리 변론(검사 - 변호인 순서, 각 5분 예정)
- 15:15 폐정(판결 선고는 별도의 기일에서 내려짐)

○ 진행단계별 중점 사항

- 제1부 모두변론과 의견진술(30분): 사건 내용 소개 및 쟁점 부가
- 제2부 질문과 답변(20분): 각 주장과 의견의 검증
- 제3부 마무리 변론(10분):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의 제시

○ 사건관계인

- 검사 : 이건리 대검찰청 검사(연수원 16기,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)
- 국선변호인 : 김용직 변호사(연수원 12기), 한연규 변호사(연수원 35기), 양은경 변호사(여, 연수원 39기)
- 참고인 : 곽민희 교수(검찰측, 숙명여대 법과대학, 민법), 오영근 교수(변호인측,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, 형사법)

☞ 피고인은 2011. 6.경 출국한 이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불출석이 예상됨

③ 공개변론 사건 관련

○ 사건의 쟁점

어린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한 행위를 미성년자약취죄 또는 국외이송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

○ 미성년자약취죄 및 국외이송약취죄의 적용법조

- 형법 제287조(미성년자의 약취, 유인)

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- 형법 제289조(국외이송을 위한 약취, 유인, 매매)

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,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②약취,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○ 관련 협약 : “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”

- 본 사안은 국제적 아동탈취에 관한 사안으로 민사적 규율을 위한 헤이그 협약과 관련성 있음
- 정식 명칭: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(The Hague Convention on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)
- 목적: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함(“선반환, 후논의”를 원칙으로 함)
- 협약 제정 등: 1980. 10. 25.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되어 1983. 12. 1. 발효된 협약으로, 현재 미국, 영국, 독일, 호주 등 89개국이 가입함. 우리나라도 2013. 3. 1. 이행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, 같은 날 발효됨. 단, 베트남은 미가입국임
- 규율범위: 협약은 탈취된 아동의 반환과 관련된 민사적 측면만을 규율할 뿐 아동을 탈취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